

정책토론회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한미 관계 전망

| 일 시 | 2017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 로 그 램 】

시 간	주요 내용
10:00~10:30	등 록
사회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0:30~11:40	[발표 1] 한미 정상회담 분석 : 송대성(前 세종연구소장)
	[발표 2] 향후 한미 관계 전망 :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1] 송중환(경남대 석좌교수)
	[토론 2] 박원곤(한동대 교수)
11:40~11:55	종합토론

【 목 차 】

■ 발표 1: 한미 정상회담 분석	9
: 송대성(前 세종연구소장)	
■ 발표 2: 향후 한미 관계 전망	26
: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토론 1	32
: 송종환(경남대 석좌교수)	
■ 토론 2	37
: 박원곤(한동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관계
전망”

주제 발표

[주제발표①]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송 대 성 (전 세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I. 문제 제기

2017. 6. 29-30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이 미국의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금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지난 5월 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있었던 회담이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두 정부의 속성을 결정하는 유전자(DNA)가 상호 간 상이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두 정부 간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많은 난제(難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소위 ‘진본정부 (Progressive Government)’로 평가받고 있는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를 구성한 핵심인사들은 대부분 친북·반미·친중적인 가치들과 정서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강한 보수성을 띄고 있는 공화당 정부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핵심인사들이 강한 반북·반공·자유민주주의·미국우선주의 가치들과 정서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따라서 두 정부 간에는 상호충돌성이 높은 유전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유전자들이 상이한 두 정부 정상간의 만남은 잘못되면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 번 정상회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현재 한·미간에는 한미동맹 결속, 북 핵 해결, 대북정책 공조, 사드 한국배치 문제, 한미 간 FTA 재협상여부, 주한미군 한국주둔 방위비 분담 문제, 한·중 관계 정립 및 공동대처, 한·미·일 3국 공조 문제,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 및 대책 공유 등 수많은 동맹국간 협의와 합의를 할 과제들이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각 과제들은 계속 새로운 상황들을 맞고 있는데 미국의 정권교체와 한국의 탄핵정국 등으로 인해 정상간 긴 외교적 공백이 있었다. 따라서 동맹국 정상 간 상호협조를 하지 못함은 물론, 사실상 한미동맹이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금 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정상가동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회담이었다.

금 번 정상회담을 두고 전문가들 간에는 (1) ‘외교 참사론’, (2) ‘허상적 유대론’, (3) ‘문재인 정부 백기론’, (4) ‘트럼프 정부 포용론’ 4가지를 가정해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해 몹시도 궁금해 했다. 4가지 주장 다 그 나름대로 일리들이 있다. 외교 참사론은 트럼프 정부의 극히 감정적이고 과격하게 반응하는 보수성 정서와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반미적인 정서가 정상회담에서 격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허상적 유대론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서로가 충돌하면서 결별하지는 않지만 내심 불만을 갖고 형식적으로는 한미동맹/한미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단 정상회담을 마무리 짓는 상황이다. 그리고 문재인 백기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하여 선거캠페인을 통해 주장한 내용들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본 인식들을 대거 수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맞추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한미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질적인 변화를 함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 포용론은 미국행정부가 현재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동맹국 한국과 갈등을 회피하고 한미유대강화만을 목표로 일단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금 번 정상회담이 상기 4가지 중 어떤 종류의 정상회담으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향후 미래는 엄청난 다른 상황들을 맞을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금 번 정상회담은 한 마디로 ‘트럼프 정부의 포용론’과 한미양측의 ‘허상적 유대론’으로 매듭이 된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갈등을 야기 시키지 않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평가 받도록 정상회담을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천을 될 경우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게 되었다.

II. 한·미정상회담 개요

1. 정상회담 개요

금 번 문대통령의 미국방문은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한미양국이 합의를 보았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동맹국 지도자를 상견하여 신뢰관계를 쌓기 위함에 주안점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고 일정을 계획토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 미국방문 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문재인 대통령 3박 5일 방미일정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2017. 6. 28 미국 워싱턴 도착
2017. 6. 28 버지니아주 미 해병대 박물관에 위치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
2017. 6. 29 오전: 상하원지도부와 간담회
저녁: 트럼프 대통령 주최 백악관 만찬
2017. 6. 30 오전: 마이크 펜스 미국부통령과 한국전기념비 헌화, 참전용사 대표들 만남
오전-오후: 한미단독정상회담+한미확대정상회담
저녁: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새 정부 외교안보정책” 강연
2017. 7. 2 귀국

2.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요지)

[표 2]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주 제	주 요 내 용
한미동맹 강화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안보증진을 통해 대한민국 방어: 재래식무기·핵포함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력 제공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동맹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비핵화 조율 .한국군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 .전작권 조속전환을 위한 협 . 트럼프 대통령 연내 방한 합의 .아태지역서 '규범에 기초한 질서' 지지
대북정책 공조	.북핵문제에 최우선 순위부여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키 위해 계속 긴밀하게 공조함 .양국 간 고위급 전략협의체 통해 비핵화 대화조율 .미국, 한국의 남북대화재개 열망지지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위해 기존 및 새 제재조치 이행: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안보리결의사항의 의무이행 촉구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퇴치를 위한 협력화동강화 .제재가 외교의 수단임을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 강조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함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데 공감 .한·미·일 안보국방 협력 강화
무역·경제 분야 협력	.상호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는 확대되고 균형 된 무역 증진 .「고위급경제협의체」를 통해 경제적 이슈에서 협력증진과 확대 .과학·기술,사이버안보, 민간우주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글로벌 협력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양국협력이 동맹의 필수불가결요소며, 동맹외연을 확장할 것을 확임 .반 ISIS국제연대에 강력한 파트너십 재확인 .아프가니스탄 평화와 재건을 위한 공동 노력

3.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

[표 3]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

주 제	언 론 발 표
한미동맹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재확인 했음: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동맹관계를 심화발전시킨다. 한미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로 동맹발전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음. 테러리즘 등 범세계적 문제를 한미가 함께 다루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임. 대한민국 역시 한미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의 독자적 방위역량을 증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협력 활성화를 기대 한다.” (문대통령 발표) “동맹의 연결고리는 공동가치에 의해서 엮여있다. 우리의 목표는 역내 평화와 안전·번영이고 항상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다. 주한미군주둔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지게 하겠다. 방위비 분담은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대북정책	“한미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양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북한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는 무자비한 북한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우리는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좀 더 나은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무역 및 경제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 보는 적자는 한미 FTA에서 보는 적자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고,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원한다. 그것을 오늘 할 수 있을 것. 한미 FTA는 지금까지는 미국에게 힘든 협정이었지만, 이제는 공평하고 (equitable) 공정한(fair) 협정이 되길 원한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조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한미무역협정은 그다지 좋은 딜(deal)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한미FTA 재협상을 공평함과 미국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논의를 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

III. 정상회담 결과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한미양국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한 (2) ‘한미정상 공동언론 발표’에 담겨져 있는 핵심내용들 중심으로 평가와 향후 과제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제 1] 한미동맹 강화

〈평가 1〉 양국 간 새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했던 ‘한미동맹’이란 열차를 우선 가야만하는 정상궤도에 정착시켜 놓았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반미·친북·친중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미상호간 합의한 한미동맹 본궤도(本軌道)를 이탈하지 않고 트럼프의 손을 잡고 함께 열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하는 것이 향후 큰 과제다.

한국의 진보정부와 미국의 우파정부가 한미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합의를 한 것은 사술적인 합의가 아니면 한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친북성향의 좌파정당들은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한반도 만악의 근원 미제국주의!”라는 북한의 구호들에 정서적으로 많은 동조들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동조를 보유하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한미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평가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안보증진 노력경주와 재래식 무기·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대한민국에 제공함”을 공약으로 채택했음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있는 현실은 비핵 국 대한민국이 핵보유국 북한의 인질이 되어있는 셈이다. 핵에는 핵 외에 다른 생존책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한 한국안보 현실을 해결하는 우선 가능한 대응책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한국에 전개하는 방안이 가장 지혜로운 방책이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명기되어 있는 동맹국간 의무 조항에 해당된다. 북한의 핵에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인데 금 번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양측이 합의한 것은 큰 성과다. 향후 과제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항시 배치하는 일이다.

〈평가 3〉 한미양국이 향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동맹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고,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한다.”는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차원의 구체적인 시스템 설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인 힘은 추상적인 구호만으로는 나오지를 않는다. 본 시스템 설정은 한미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방부와 외무부/미국 국무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역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진정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이런 시스템 설정도 의미가 없게 된다.

〈평가 4〉 “한미동맹을 아시아-태평양지역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동맹관계를 심화·발전시킨다.”는 합의내용은 한국의 국가안보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당당함과 의연함을 갖고 본 합의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인지 시험받게 될 사항이다. 본 내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신뢰구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평가 5〉 문대통령이 ‘한국의 독자적 방위역량 증진’을 강조함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조기 전환’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조속 전환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명기하고 있다. 본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합의한 사항들이 있다. 조기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본 조건들이 충족됨 여부를 한미양국이 엄격히 체크하고 충족되는 경우에만 전환을 협의할 수 있다. 전환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급히 시도하면 지난 날 좌파정부 시절 ‘1천 만 명 전작권 조기전환 반대 서명운동’을 포함하여 수많은 갈등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주제다. 전작권 조기전환 추진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심각한 갈등 유발과 한국안보역량훼손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유발케 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내용이다.

〈평가 6〉 “미국 트럼프 대통령 금년 내 한국방문 합의”는 한미동맹 결속을 위해 바람직한 합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인 동시에 동맹국을 우선 챙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진보정권과 미국의 우파정권 간 상호불안감 해소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주제 2] 대북정책 공조

〈평가 1〉 한미양국은 ‘대화와 제재’, ‘단계적과 포괄적’이란 서로 색깔이 완전히 상이한 용어들을 비빔밥처럼 섞어놓음으로서 북한 핵을 해결하는 해법에 대한 애매모호성을 증대시켜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향발 기내에서 강조한 ‘핵동결→대화→폐기’와 ‘단계마다 보상’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방안은 지난 날 북한의 비핵화 방안 중 가장 실패한 방안이다. 비빔밥처럼 애매함을 증대시킴이 결국 “핵동결을 하면 대화를 한다.”는 뜻을 내포

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지난 6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전용기내에서 북한 핵관련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다. 문대통령은 기내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에 (한꺼번에) 완전한 북핵폐기로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최소한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동결 정도를 약속해야 대화할 수 있다”, “‘핵동결→핵폐기’로 가는 과정 중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돼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동결에 대응해서 한·미간에 무엇을 주어야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기왕에 만든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들을 다 폐기하는 단계에 간다면 또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것” (단계적 보상 주장). 단,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간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미의 공식입장이며 달라진 것이 없다”, “철저한 검증 속에 이뤄져야 한다.”, “중간에 북한이 (동결)합의를 파괴하고 핵으로 돌아간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에 대한 해법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정서는 대단히 상이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는 2017년 6월 2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학술회의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한 접근법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핵동결과 보상을 교환하자는 비핵화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서는 “과거에 북한은 6자회담 등을 통해 핵동결과 단계적인 폐기를 약속했지만 보상만 챙긴 뒤 합의를 깨고 핵능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원칙과 압박정책 구사를 강조하면서,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북한의 기만전술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막상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정서는 사라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화과 제재”, “단계적”과 “포괄적”이란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평가 2〉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몰아쳐오던 북핵 폐기를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에 ‘대화’와 ‘단계적’ 등의 용어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 북핵 폐기를 위한 강력한 제재 추구라는 비핵화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어느 불량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도 대화에 의해 비핵화를 한 예는 없다. 그래서 불량국가를 상대로 비핵화를 함에는 강력한 제재 혹은 군사작전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정론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본 정론을 주장하고 있었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4일 미국하원에서 〈419 대 1〉로 통과된 초강력 ‘북한제재 현대화법’은 ①어업권 판매를 포함한 자금줄 확실한 차단, ② 원유수입 금지, ③ ‘노예노동’ 수출 금지, ④ 북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제3국 업체, 미국관련 사업금지 및 은행거래 차단, ⑤ UN대북제재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선박 미국수역진입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제재방안

정신에 상당히 물 타기를 한 내용이다.

물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중에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위해 기존 및 새제재 조치 이행”이라는 합의사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단 남북한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남한 입장에서는 강한 제재를 추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 접근”과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바로 ‘전략적 인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사술에 놀아나는 비핵화 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수 없이 했다.

이러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문대통령의 “대화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를 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남북한 동족 간에 대화를 해보겠다는 데 그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시진핑도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못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한다는 말인가?”하는 생각에서 일단 대화로서 노력해 보도록 기회를 주어본다는 점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런 점에서 “문대통령이 대화로서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니 못하지 않느냐?”하고 책임추궁을 할 가능성도 있다.

〈평가 3〉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합의내용은 향후 한·미 간 갈등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탈 미국, 자주성”적인 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다. 본 합의내용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할 경우 한미 간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외교특보 문정인의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안한다는 미국입장 수용 못해. 남·북대화가 미·북대화 조건에 맞출 필요는 없어”라는 워싱턴 발언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한미동맹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본 합의내용을 100%활용하려고 할 것이며 이것이 미국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평가 4〉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데 공감 한다”는 합의 내용은 대북제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한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되어 부메랑 되어 되돌아오는지 알 길이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구하면서 “인권차원의 지원”, “인민들 생계차원의 지원” 명목 하의 지원들이 결국 제재의 구멍이 됨을 중국의 대북지원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생생한 교훈이었다.

[주제 3] 무역·경제 분야 협력

〈평가 1〉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문제를 향후과제로 인식하고 정상회담에 임한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한미 FTA 재협

상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재협상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평가 2〉 미국은 정상회담 이전에는 사드 한국배치 등 안보이슈에 집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강공을 취하다가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적인 실리추구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협상전략을 구사했다. 중요한 안보이슈들은 사전조율을 통해 정상회담 석상에서 갑론을박하는 양상을 회피케 협상전략을 구사했다. 사전조율이 되지 않는 안보이슈는 각자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형식을 취하게 했다.

[주제 4] 글로벌 협력

〈평가 1〉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양국협력이 동맹의 필수불가결요소며, 동맹외연을 확장할 것을 확인”한 것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위해 대단히 긍정적인 합의 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이란 수정된 동맹구조와 목표들을 보유하고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3가지 목표 중 하나가 “가치동맹”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세계평화확보에 기여라는 공동가치 추구를 한미동맹의 한 목표로 삼고 있다. 본 합의 내용은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공동가치의 협력적인 추구가 동맹관계를 더욱 결속케 한다.

[주제 5] 사드 배치 문제 (정상회담 주제에서 빠졌으나 미 하원에서 언급된 주제)

한국에 사드배치문제는 사실상 금 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 중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하원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사드문제 관련 언급이 있었다⁴

“사드체제는 양 국민 방어에 필요한 중요한 안보수이다” (폴 라이언 의장(공화당))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나 또는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임으로 북 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한미양국이 핵심주제 중 하나인 사드 한국배치 문제를 정상회담 주제에서 제외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 1〉 한국에 미국 사드배치문제는 한미동맹차원에서 이미 한미양국 간에 “2017년 내 한국배치완료”로 결정이 난 주제다. 이미 결정된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문제를

삼으려고 한데서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한국배치를 두고 시간지연 작전을 펴는 분위기가 있자 트럼프 행정부의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정서는 강경해졌다. 지난 6월 1일 미국 국방예산을 켄 더빈(Dick Durbin, 민주당 상원의원, 일리노이) 상원 원내총무는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시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를 한국에서 뺄 수 있다. 1조원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사드배치에 대한 시간지연 전술을 막기 위한 대못질을 하고 돌아갔다.

이러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정서를 간파한 문재인 정부는 일주일 후 사드 한국배치 의제를 정상회담의 의제에서 뺄 것을 먼저 제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미 결론이 난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한미정상 간에 갑론을박하고 그 결과 사드배치 철회 운운함은 한미양국에게 하등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후 한미정상회담 실무자들이 사전 조율하여 의제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대단히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평가 2〉 사드 한국배치를 두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배치철회를 하지 않는 한 중국은 계속 불만과 협박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협박에 많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평가”와 “국회승인”이라는 조건들을 걸어놓고 격한 이슈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되어 정상회담 주제에서 제외된 배경이라 추정되며, 본 결정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3〉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제는 당당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정도다. 이런 의미에서는 한미 양측 다 새로운 정상들 만남에서 중요한 국가안보이슈 중 하나인 한국에 사드배치문제를 당당하게 거론하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 하도록 최종 확정을 짓는 것이 정도다. 당연히 해야만 하는 안보적인 조치에 대해 마치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정상회담 주요의제에서도 생략하는 행태는 마치 중국이 두려워 좌고우면 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인식될 수 있다. 당연히 취하여야만 할 독자적인 안보사업을 적대국 혹은 준적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나약한 면을 보이는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지난 6월 29~30일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을 다음과 같이 요약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정상회담 전에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소위 ‘외교참사론’을 우려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양국정상은 한미동맹을 본래 가야만 할 궤도위에 올려놓으

면서 ‘외교참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정상회담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그 속성이 상호 상이한 한국의 진보정권과 미국의 보수정권이 외교적 참사를 모면한 이유는 양국 각각이 상호충돌을 해서는 안 되는 각각의 절박한 이유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1) 외교 참사→사드 철회→주한미군철폐→미국의 북한 공격→한반도 전쟁이라는 미국의 정서를 두려워했고, (2) 진보정권일지라도 미국과 결렬된 한국의 상황은 안보와 군사적인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옴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한미충돌’보다는 ‘한미유대’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1)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한국의 진보정권을 친북·친중 대열에 서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품안에 부여잡고 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으며, (2) 서서히 대결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중국 대결에서 한미일 3국 공조는 절실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때문에 ‘외교적 참사’라는 카드보다는 ‘트럼프 정부 포용론’ 혹은 ‘허상적 유대론’ 카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집권이후 지금까지 “북 핵 폐기를 위해 대화는 실패 카드”라고 부르짖으면서 “강력한 제재”만을 주장해 온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재·대화+단계적·포괄적” 카드를 수용한 것은 향후 강력한 제재를 망가지게 하는 큰 구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험성을 미국이 모를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제의를 수용한 것은 (1) 남북한 동족 간에 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할 명분이 약하고, (2) 문재인 정부에게 대화로서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기회를 주어보고 불가능할 때 더 강력한 제재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중이 포함되어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시간만 주면서 비핵화 전체 작품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중 간, 한·미 간, 국내적으로 보수·진보 간 첨예한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 문제를 한미정상회담의제에서 뺀 것은 그 나름대로 지혜로운 면도 있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의제에서 뺐다고 해서 기존 갈등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천명한 “2017년 내 한국배치완료로 결정 난 주제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모든 내용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좌고우면하면서 사드 배치문제를 이슈로 등장시키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불신은 순식간에 고조될 수 있다. 안보는 당당한 자세가 중요하다.

다섯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안보증진 노력경주와 재래식 무기·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대한민국에 제공함”을 한미양국정부가 공약함은 현 한국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있는 현실은 비핵국 대한민국이 핵보유국 북한의 인질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핵에는 핵 외에 다른 생존책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한 한국안보 현실을 해결하는 우선 가능한 일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한국에 전개하는 방안이 가장 지혜로운 방안이다.

여섯째,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합의내용은 향후 한·미 간 갈등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탈 미국, 자주성”이라는 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다. 본 합의내용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할 경우 한·미 간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한·미 동맹을 거추장스럽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본 합의내용을 100%활용하면서 소위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미국을 배제시키려고 할 가능성도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서가 한·미공조라는 차원에서 심한 미국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조속 전환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명기하고 있다. 본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합의한 사항들이 있다. ‘조기’와 ‘주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본 조건들이 충족됨 여부를 한·미양국이 엄격히 체크하고 충족되는 경우에만 전환을 협의할 수 있다. 전환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주”만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조급히 시도하면 지난 날 좌파정부 시절 ‘1천 만 명 전작권 조기전환 반대 서명운동’을 포함하여 수많은 갈등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전작권 조기전환 추진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심각한 갈등 유발과 한국안보역량훼손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유발케 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금 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결과는 상황 자체는 ‘외교 참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미양국의 절박한 “충돌을 회피해야만 한다”는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포용론’ 카드를 사용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일단 ‘허상적 유대론’ 카드를 사용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포용론’과 한·미양국의 ‘허상적 유대론’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참된 대한민국적 가치들을 철저히 수호하겠다는 신앙적 신념과 실천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표 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날 채택된 '한미 동맹 강화',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모두 6개 분야다.

■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 한미 동맹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2.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협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 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 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3.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4.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5.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천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6. 동맹의 미래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부표 2] 한미정상회담 중 중요 특이사항

- (1) 문재인 대통령 공방도착 후 미국의 의전행사: 상당히 홀대로 보임
 - No 카펫, No 국기, No 중요 인사 영접 등
 - 어느 힘없는 나라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는 경우에 해당하는 통상적 예우
- (2) 장진호 전투 기념관 참배
 - 주제선정을 잘 했음
 - 문대통령 연설 내용도 상당히 좋았음.
 - *트럼프 대통령: “문대통령 ‘장진호 전투 기념비 연설’ 훌륭하고 감동적이었음.”
(6월 28일 만찬 시)
- (3) 6. 29 저녁, 백악관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 초청 125분간 만찬.
 - 국민방문 수준의 Dinner라기 보다, Working Dinner 수준
 - 트럼프: “방금 한국의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마쳤다.”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포함해서 많은 주제들이 논의 됐다”(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올린 글)
- (4) 6.30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대통령은 <(1) 단독 +(2) 확대 정상회담> 직후 한미공동언론 발표
- (5) 6.30일 아침: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6.25참전용사들과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
- (6) 정상회담 기간 중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단둥은행 제재전격” 발표

[주제발표②]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전망¹⁾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한미정상회담 총괄평가

□ 한·미 정상간 상견례 수준의 회담

-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정상간 우의를 다지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
- 총론 합의, 각론 異見의 가능성이 잠재된 ‘절반의 성공’을 이룬 회담
 - ※ 이와 달리, 한·미 공동성명은 형식적인 ‘수사적 표현’일 뿐, 무게중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지 및 무역문제의 미국 주도권을 확인한 회담이라는 평가도 있음(英 가디언紙 7.1)

□ 實利[현찰]를 내주고 名分[어음]을 얻은 회담

- 미국에게 내준 實利 :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 한국이 얻은 名分 : 한국의 남북관계 주도적 역할, 북핵문제의 단계적 접근 및 제재 속에 대화 병행

□ 안보는 공감, 경제는 異見

-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 부여 재확인은 성과
-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무역불균형 개선 등의 숙제 부과

1) 이 발제문은 발제자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한중관계에 있어 우리정부의 부담 가중

- 사드 배치에 관한 입장 표명이 없음으로써 한·중 갈등 내연
-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증진 재확인

2. 향후 예상되는 주요 쟁점

□ 북핵문제 해결과정

- CVID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공동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
-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대통령은 對北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두면서 대화에는 조건을 붙임
- ‘올바른 여건 아래(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함으로써, 文정권이 對北 대화에 방점을 둔 것과는 달리 ‘올바른 여건’의 대화시점을 둘러싼 논란 소지
- 文대통령의 ‘(입구)先동결, (출구)後폐기’의 경로에서 취할 검증방법과 조치의 수준 및 각 단계별 북한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논란 소지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의 조율문제

□ 한국의 ‘주도권’ 범위

- 한반도 통일(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는 미국의 전통적 입장

-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와 전세계의 핵확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미국 입장
- 그러므로, 평화통일 환경 조성과 북핵·미사일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방위비 분담금 증액

- (트럼프대통령)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공동성명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국방부(7.3)는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느낌

□ 한·미 FTA 재협상

- 공동성명에는 ‘한·미 FTA 재협상’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공정한 무역발전’을 위한 합의사항으로 반영
- (한국)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조사·평가할 것이라는 입장
- (세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 “트럼프대통령의 지시로,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 하이퍼 대표는 FTA 협정을 재협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특별공동위원회’를 소집할 것”
- ※ 김경수(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트럼프대통령이 한·미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이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사드 배치

-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지 않기로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은 여전히 內燃
- 文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의 번복이 없음을 재확인(CSIS)하면서, 다만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
- ※ 환경영향평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모호,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사드 배치 不可明분이 제공될 수도 있음

3. 향후 한미관계 전망

□ 공화당과 트럼프대통령의 북한觀 유념

- 美 공화당 政綱에는 북한을 ‘노예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정권을 ‘잔혹한 정권’으로 비난
- 美 공화당 행정부의 레이건대통령(1980년대)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을 ‘악의 제국’으로, 부시(Jr)대통령(2000년대)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여 ‘제거(붕괴) 대상’으로 보았음에 주목

□ 압박과 제재가 강화된 대북정책 지속 전망

- 트럼프행정부의 對한반도 정책 조직과 정책내용 정비와 함께 한국의 남북관계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당분간은’ 대북 강경책을 유예할 가능성
- 그러나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時 미국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다리지 않고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대통령은 강경한 대북인식과 함께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 ‘적어도’ 트럼프행정부 초기에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의 틀 속에서 대북정책 지속 전망
- 다만, 미국의 對중국 압박카드로 북핵문제가 활용되므로 미중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대통령의 협상스타일에 비추어 미북관계의 반전 가능성 주목

□ 남북관계 ‘주도권’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文정권의 비용 지불 가능성?

- 국제정치현실에서 ‘주도권’ 확보는 비용지불이나 압도적 무력행사로 가능하므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위해 미국에게 상당한 규모의 대가 지불 개연성 충분
- 이 점에서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약속 및 사드 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의 연계성 등이 의심됨
- 설령, 북한이 북핵협상에 나와 ‘先동결, 後폐지’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진 한국이 북한에 대한 보상을 거의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1994년 경수로 제공時 비용분담사례 참조

□ 금년 하반기 이후 한·미간 마찰 가능성

- 2019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이 금년 말에 시작되고, 내년에는 FTA 재협상, 저작권 조기 전환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협상의 시작으로 남남갈등은 물론이고 한·미간 마찰로 확전 가능
-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결방법을 둘러싼 한·미간 마찰

□ 文정권의 남북 대화·협력 조급증으로 인한 갈등 증폭 가능성

-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갈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에서 文정권의 남북 대화·협력 조급증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을 와해시키고 오히려 한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음

- (남남갈등 심화) 文정권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과욕과 목전에 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완료 사이에서 대북인식과 접근법을 둘러싼 남남갈등 심화 우려

※ 文대통령 귀국인사(7.2),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

- (남북갈등 지속) 북핵과 북한정권에 대한 양 정상의 강경한 입장이 확인됨으로써 북한의 반발과 함께 남북 갈등 지속

※ 北 조국통일민족전선(7.4), “... 남조선에서 개혁을 표방하는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 오늘에도 통일문제와 북남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진 것은 없으며 따라서 북남관계의 전도 역시 낙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후 부정적인 첫 반응을 보임

[토론①]

북한 핵 폐기의 길*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 파키스탄 대사)

송대성 박사의 주제 발표가 종합적이고 완벽하여 비판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다만 1970년대 초부터 정부 관리로서 또 재야 학자로서 남북한 관계와 미·북한 관계 업무에 종사했던 연구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첨언하려고 한다.

6월 29일부터 30일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개항 공동성명과 공동발표문으로 한국은 한반도 평화통일 조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 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한 무역 불균형 개선 요구를 받는 등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발언 등으로 ‘외교 참사’, ‘한미동맹 관계 지속 여부의 분기점’²⁾으로 까지 전망되는 불안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조속 전환을 위한 협력 지속을 합의하고 CSIS에서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원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미국기업가들에게는 북한에의 투자를 권하는 등 북한에 대한 온정적 발언을 하여 우려를 자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미군사동맹 강화와 북한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을 합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성공적’ 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미 양국 정상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순위로 부여한 북한 핵 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다. 관련하여 새 정부와 국민이 명심하고 채택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과거 북한과의 성과 없는 협상으로 북한에게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주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은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이용 방지와 평화적 목적 이용 장려를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

* 세종대학교 세종연구원은 2011년 봄 Global Affairs를 복간하면서 『북한 핵 대응책은 무엇인가: G2 시대의 핵 생존전략』 특집을 발간했다. 이 학술잡지에는 남시욱 편집자 노트에 이어 ‘제 1부 기만과 우롱의 북핵 포기 협상 20년’에 송종환, 도널드 커크, ‘제2부 한국의 선택’에 김대중, 이춘근, 박근, 유용원, 김희상, 김태우, 유명환, ‘제3부 원자력 기술 자립의 과제’에 장인순, 이정훈, ‘제4부 북핵과 주변국의 반응’에 김정원, 전경만, 전진호, 정태익, ‘제 5부 핵개발 강행한 국가(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들의 사례’에 조갑제, 라빈다싱, 이장훈이 작성한 논문들이 차례로 게재되었다.

6년이 지났지만 각 논문들의 내용들은 지금 보아도 유효하며 해당 분야 연구가들이 천착할 가치가 있는 좋은 자료로 보인다.

2) 송종환, “문-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지속 여부의 분기점,” 『미래한국』 Vol. 551, 2017. 6. 28, pp. 52-53.

력기구(IAEA)에 1974년 가입하고 또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축소 및 비보유국으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핵비확산 조약(NPT)에 1985년 12월 가입하였다.

북한은 우리와 1992년 1월 20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1992년 4월 10일 IAEA와 핵안전협정을 발효시켰다. 1992년과 1993년 IAEA가 핵 안전협정에 의거하여 북한 내 핵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북한은 IAEA 대신 미국과의 협상을 고집하여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합의하였다. 2002년 1월 25일 취임한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10월 3일~5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그(플루토늄 재처리에 의한 핵무기)보다 더 한 것(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도 가지게 되었다고 위협하였다.

2003년 1월 14일 부시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회담을 제의하여 4월 23일~25일 베이징에서 미-북-중 3자 회담, 8월 27일부터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가하는 6자회담이 성립되었다. 2008년 7월 12일까지 계속된 일곱 차례의 회담에서 네건의 합의문서가 채택되었으나 북한은 검증 단계에 이르자 자신들이 신고한 시설에 대한 사료 채취를 거부하였다.

북한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한 후 동 국제기구와 한국, 미국과 그리고 6자회담에서 5개국을 상대로 차례로 협상을 하면서 핵 프로그램 동결의 대가로 각종 보상을 받으면서 핵무기 개발 시간을 벌어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핵실험을 다섯 차례 하였고 이제 제6차 핵 실험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핵탄두 10~2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탄두 제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과거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하던 북한이 1990년 대 초부터 국제기구와 관계국들과 협상을 하는 동안 핵 강국이 되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에서 문대통령이 말한 대로 북한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라면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북한이 동결한다면 우리가 사찰과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만한 것이 있는지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이제까지 대화와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통한 압박이 주효하지 않았으므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할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재개 제의에, 특히 핵 폐기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적게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사흘 후인 7월 4일 북한은 남북한 관계 개선과 대화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 성명을 통해 “남한에서 개혁을 표방하는 새

정권이 들어선 오늘에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해 나오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한국 정부 태도를 문제시 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를 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새 정부의 유연한 대북 접근은 허망하게 되고 동맹 미국과의 갈등만 자초할 것으로 보인다.

1971년 이후 우리의 대화 제의에 북한 측이 응해 나온 경우는 1970년대초 미·중 수교를 위한 대화 개시, 1990년대 초 동구 공산권 붕괴와 독일 통일과 같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수백만이 아사한 경제난으로 체제 유지가 어려웠을 때였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화를 지나치게 종용하거나 당근을 줄 것이 아니라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특단의 대책은 이제까지의 발상을 전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

이 대책은 북한이 한국에 핵·미사일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과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는 ‘공포의 균형’을 갖추는 데에서 출발한다.

일찍이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젠소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반격 수단이 없는 한 나라는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³⁾ 이러한 경고에 따라 우리가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조기에 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우리 스스로의 무장력을 신속하게 높여야 한다. 지난해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 실험 후 국방부가 발표하고 이번 한미공동성명에서 일부 포함된 3축 타격체제, 즉 (1) Kill Chain: 탐지, 식별, 타격명령, 타격완료의 순환단계 (2)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3) KMPR:대량응정보복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SLBM 공격에 대비해 한국 이지스 구축함 3척의 SM-2를 SM-3로 교체하고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PAC-3에 추가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 강철지붕)’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

둘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현용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높은 150km 이상의 고도에서 먼저 요격을 하는 사드 배치로 주한미군 방어책을 강화함은 물론 B-1B, B-52, B-2 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제주 해군기지 정기 배치, 핵 잠수함 동해 배치 등 적시성, 신뢰성, 실천성 등

3) 이 경고에 따라 1959~1962년 대중국 전쟁에서 패배한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여섯 번의 핵 실험으로 핵 무장을 하고 속적 파키스탄도 1998년 우라늄 핵폭탄 1기와 플루토늄 핵폭탄 4기를 한꺼번에 실험하여 핵무장을 하였다. 1947년 8월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리, 독립 후 세 차례의 지엽적 전쟁과 국경선에서의 수시 포격으로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상호 핵 무장은 서로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면 전쟁을 막고 있다.

실행력을 높이는 고강도 군사 조치들을 미국과 적극 논의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최근 주한미군이 사드 전력화 지연에 일정을 앞당겨 군사분계선(MDL) 이남 상공에서 평양 주요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제즈(JASSM)를 배치한 것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억제를 위하여 NATO식 전술핵 재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를 조기에 논의하여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이 임박한 만큼 한국은 한·미 공동관리·통제 하에 독자 핵무장 추진을 제의하여야 한다. 동 독자 핵무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력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들은 이번 한미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을 합의한 취지에 부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과도 연결되어 미국과의 협의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핵의 궁극적 폐기를 위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 공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는 더 이상의 반미감정 확산을 방지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 체제에 대한 온정주의자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리비아, 이라크 붕괴 경험에 비추어 체제 보장을 위한 실용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진의는 미국과 한국을 이간하고 대남 공격을 위한 것이다.⁴⁾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 실험으로 핵무기로 무장하였고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어디의 목적지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이 황해북도 신계에서 SCUD-B(사거리 300km)를 발사할 경우 서울까지의 거리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3분 40초(220초), 대전까지의 거리 3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5분(314초)가 소요된다.

이렇게 엄중한 안보 위기에 살고 있는 데도 다수의 한국인들은 안보불감증에서 태평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맹방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성주 사드 반대 시위대에 막혀 유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 사드 레이더 작동이 중단되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미군 유류차량 진입을 막는 검문을 하고 있다.

지난 달 10일 의정부시가 마련한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민노총 등의 출연

4) 크리스토퍼 힐, “북한의 진짜 전략,” 해외석학 칼럼, 『한국일보』, 2017. 6. 25.

가수와 기획사에 대한 출연 반대 협박으로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4일 수십 개 반미 시민단체의 6000여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가진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여 행진하였다.

한미정상회담 후에 진행되는 일이지만 충남 천안시가 평택기지 인접 도시에 주한미군이 오는 8월부터 이전을 시작해 2020년 재배치가 완료될 경우

인접도시 이점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월 말 미군과의 축제 개최를 추진하자 10개 시민단체가 범죄,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동 축제 개최를 반대하여 무산시켰다.

주한미군과의 친선행사를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은 친선 행사 취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하느냐고 까지 한다고 한다. 이런 반미행동은 1950년 북한에 의한 6·25 남침 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에 와서 수많은 인명 희생을 하고 지금도 우리의 안보를 돕고 있는 우방국에 해서는 안 되는 망동이다. 정부는 반미 단체들이 더 이상 반미감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설득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북한 핵무기의 궁극적 폐기를 위한 긴밀한 한미공조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1990년 대 초부터 이제까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와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에 비추어 유감스럽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화와 제재를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의 반복이 근원적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이 되지 않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의 이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 (1) 북한 핵 동결 단계에 취할 확실한 사찰과 검증 방안을 확보하고 북한의 합의사항 위반에 보상을 하지 않을 것, (2) 대화와 외교적, 경제적 제재 외에 ‘공포의 균형’에 의한 군사적 압박 추가,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제의한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보완책들을 추진하였음에도 북한 핵 폐기에 성과가 없더라도 그러한 보완책 추진 자체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반드시 채택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②]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관계 전망

박원곤 한동대 교수

[illegible]

[illegible]

서울시 중구 통일로86(순화동), 바비엥3차 612호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

